

등록번호	입법정책담당관-
등록일자	2017. 9. .
결재일자	2017. 9. .
공개구분	공 개

담당자	정책지원 팀 장	입법정책 담당관	사무처장	의 장
이 상 민	정명희	정명희	정명희	정명희
협 조	주무관	이철수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I. 총평	1
II. 주요 토론내용	2
① 주제발표(1인)	2
② 지정토론(6인)	2
③ 청중토론(4건)	5
III. 토론회 결론 및 성과	6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6
[부 록]	
□ 토론회 사진	7
□ 언론보도 현황	8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 및 각종사고 시, 지역의 민간단체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자 의정토론회 개최.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7. 9. 13.(수), 14:00~16:30 / 홍성 문화원 대강당
- 참 석 : 80여명(도민, 민간단체, 도의원, 관련 공무원 등)
- 주 제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

I 총 평

- ❖ 금번 토론회는 도민, 민간단체, 도의원,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이란 주제로 각종 재난 및 사고시에 민간단체의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 참가자 대부분은 지역사회에서 재난사고 및 각종사고 시, 1차적인 대처는 주민 자신들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이 필요함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으며,
 - 또한, 지역사회 민간단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토론회를 통하여 도출하였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 지역사회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현대사회와 같은 복잡 다양한 환경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도민들 스스로 관객민주주의가 아닌 참여민주주의로의 인식의 변환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에 대하여 역설함.
- 지역사회의 안전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행정, 소방, 경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 스스로 안전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부문과 官 주도 부문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이를 위해 공익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각종 안전관련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역량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외사례를 예로 들며 지역사회 안전의 성공적인 정착의 핵심은 정부와 주민간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

2 지평토론 (6인)

① 광봉식 (충남 의용소방대 홍성연합회장)

- 2016년 3월부터 의용소방대의 역사 및 정신을 이어갈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마을담당제를 운영해 오고 있음.
- 각종 화재를 비롯하여 재난 현장 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 내 으뜸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마을담당제를 통해 지역민들이 직접 지역민들에게 사고발생시 대응방법, 피난 유도,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 통학길 안전대책 활동과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순찰활동을 통하여 각종 시설 점검활동 등 취약지역 및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및 확인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확보에 일조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대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 됨.

② 최용영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회장)

- 대한적십자사는 최소한의 지원으로 최대한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봉사단체로서 재난현장에 구호품 전달 및 각종 재난재해, 사고시에는 복구 봉사 활동을 하고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통하여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안전지식 보급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봉사단원으로 자긍심 고취를 이끌어내며 순수봉사단체로서 모범이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 및 안전대책에 대한 교육을 자원봉사자들의 기부에 의존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다소 어려우며 추후에 행정적 혹은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사기진작 대책의 지원이 수반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③ 이진수 (충남도청 재난대응과장)

- 실제 재난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협조사항에 대하여 협조가 되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는 주요 재난사고 상황에서 행정과 주민간의 불신을 야기함으로 인해 지역사회 안전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 충청도청 재난대응과는 날로 높아지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수준의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재난대응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중이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역량을 키워 자치권 및 자치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④ 김광중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부회장)

- 해병대전우회는 비영리 법인단체로써 최초에는 선후배들끼리 계모임 형태로 시작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 성장하였고, 현재는 전국의 축제 현장 및 각종 재난사고 등 도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일이라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음.

- 어떤 재난, 재해 및 구호예방의 어떤 업무를 주더라도 해낼 수 있는 재원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니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요청함.

⑤ 박근오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 충남은 화재등 각종지표상 안전역량이 평균치보다 떨어지고 있어 안전에 취약한 환경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대응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복구에만 집중하는 등 근시안적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각종사고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연구원에서는 충남 2050과 같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래창조적 안전예방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음.
- 정부는 각종사고 시 책임을 지방에 넘겨왔으나, 책임을 넘기기보다 적극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각종사고 발생시 생존율을 살펴보면, 스스로 탈출하여 생존하는 경우 67%, 주변사람들의 도움 28%. 즉 95%는 스스로 자력으로 벗어나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생존함.
- 따라서, 각종단체들의 활용방식도 중요하지만 사고시에 주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훈련을 해보야 하며, 주변의 위험요소들을 인지하여 다양한 정보 경험들을 통해서 공유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책이될 수 있음.

⑥ 김점훈 (한남대학교 교수)

- 봉사단체는 재정적 지원 요구보다 본래의 취지에 맞는 역할과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충남도 차원의 대비는 잘 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넘쳐나는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컨트롤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할 것임.
- 세월호 침몰 당시의 경우를 비춰봐도 재정적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넘치는 여러 단체들의 효율적 관리가 안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간의 안전거버넌스 구축으로 각종사고시 통합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함.

3 청중토론(질의답변)

○ 천재지변뿐만이 아니라 인재사고에 대해서도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충남도민]

○ 해병대 전우회에서 교통정리 등 각종 봉사활동 시에 도민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통제가 어려워,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을 건의함.

[해병대 전우회 공주지회]

○ 해병대전우회는 30여년간 봉사해온 단체로서 他 단체의 경우 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해병대는 소외되고 있는 있음. 따라서, 해병대전우회에도 행·재정적인 지원을 건의함.

[해병대 전우회 당진지회]

⇒ 해병전우회는 자생적인 봉사활동 단체로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하지만 재정력 없이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중요함. 해병대는 역사가 깊은 봉사단체로서 자생력을 갖추도록 노력하여 모범적 사례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답변: 김경훈 한남대학교 교수]

⇒ 道는 현재 직접지원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은 제도적·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간접적 지원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답변: 충청남도 재난대응과장 이진수]

○ 적십자사 봉사활동에 수지침을 무료로 강의할 의향이 있음

[홍성군민]

⇒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각층에서 제시하는 대안과 가치를 수렴하여 추후에 있을 토론회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를 연구하여 내실 있는 민간단체 활용방안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

[답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화 위원]

III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재난사고시 민간단체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2. 지역사회 안전구축을 위한 역할분담 논의
 3. 지역주민, 봉사단체와 충남도청 간의 협업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지역주민, 봉사단체와 충남도청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민관협력 구축
- 지역주민과 봉사단체가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의식에 대한 인식의 변환의 필요성 대하여 공감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기획관실, 도민협력새마을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붙임 : 1. 토론회 사진
2. 언론보도 현황
3. 토론자료(따로 붙임)

참 고 1

토론회 사진



참 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별	제 목 (21건)	비고
신문보도		6건	
1	대 전 투 데 이	충남도의회,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 위한 지원 방안 논의	
2	중 앙 매 일	충남도의회,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 위한 지원 방안 논의	
3	금 강 일 보	충남도의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머리 맞대	
4	서 울 일 보	충남의회, 안전 네트워크 구성 지원 논의	
5	충 청 신 문	민간단체 · 지역민 활용 안전네트워크 갖춰야	
6	충 남 일 보	충남 민간단체 체계적 지원과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돼야	
인터넷 뉴스		15건	
1	N E W S I S	충남도의회,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 위한 지원 방안 논의	
2	디 트 뉴 스 2 4	충남도의회,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 위한 지원 방안 논의	
3	뉴 스 충 청 인	충남도의회,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 위한 지원 방안 논의	
4	충 남 투 데 이	충남도의회,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 위한 지원 방안 논의	
5	세 계 타 임 즈	충남도의회,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 위한 지원 방안 논의	
6	타 임 뉴 스	충남도의회,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 위한 지원 방안 논의	
7	c 뉴 스 4 0 1	충남도의회,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 위한 지원 방안 논의	
8	코 리 아 닷 컴	충남지역 안전 네트워크 구축 의정토론회	
9	뉴 스 파 고	충남도의회,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 위한 지원 방안 논의	
10	국 제 뉴 스	충남지역 안전 네트워크 구축 의정토론회	
11	특 급 뉴 스	충남도의회,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 위한 지원 방안 논의	
12	굿 뉴 스 3 6 5	충남도의회,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 위한 지원 방안 논의	
13	신 아 일 보	충남도의회,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 위한 지원 방안 논의	
14	대 전 타 임 즈	충남도의회,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 위한 지원 방안 논의	
15	지 케 이 뉴 스	충남도의회,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 위한 지원 방안 논의	

※ 보도내역 별첨

충남도의회,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 위한 지원 방안 논의

이종화의원 요청, 지역사회 안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 및 각종 사고 등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민간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각종 사건사고에 있어 경찰이나 소방력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와 지역민이 함께 안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13일 홍성문예회관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화의원(홍성2)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는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의원이 좌장을,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곽봉식 의용소방대 홍성연합회장, 최용영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회장, 이진수 충청남도 재난대응과장, 김광종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재난 및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인식됐던 게 사실"이라며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과 자원봉사단체 간의 민

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할 방안에 관해 조례 제정 등 근거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금 부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OECD 교통사고 사망자수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2014년 기준 4647명, 보행자 노인사망자수 1위를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역량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전과 관련한 주민참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주민참여 확대는 자치권 및 자치역량 강화로 이어지며, 안전역량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도와 시·군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정복기자

충남도의회,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 위한 지원 방안 논의

이종화 의원 요청 지역사회 안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사진은 의정토론회 장면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 및 각종 사고 등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민간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각종 사건사고에 있어

경찰이나 소방력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와 지역민이 함께 안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13일 홍성문화원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화 의원(홍성2)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는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의원이 좌장을,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광복식 의용소방대 홍성연합회장, 최용영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회장, 이진수 충청남도 재난대응과장, 김광종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재난 및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인식됐던 게 사실"이라며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과 자원봉사단체 간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조례 제정 등 근거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금 부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OECD 교통사고 사망자수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2014년 기준 4647명, 보행자 노인사망자수 1위를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역량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전과 관련한 주민참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주민참여 확대는 자치권 및 자치역량 강화로 이어지며, 안전역량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도와 시·군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오현수 기자

241 X 134 mm



충남도의회는 13일 홍성문화원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충남도의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머리 맞대

민간단체 활용방안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13일 홍성문화원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종화 의원(홍성2)이 좌장을, 금홍섭 대전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광복식 의용소방대 홍성연합회장, 최용영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회장, 이진수 충남도 재난대응과장, 김광종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재난이나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은 중앙 및 지방정부 책임으로 인식됐던 게 사실"이라며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과 자원봉사단체 간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할 방안에 관해 조례 제정 등 근거를 확립하겠다"고 부연했다.

금 부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과 관련한 주민참여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주민 참여 확대는 자치권과 자치역량 강화로 이어져 안전역량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충남의회, 안전 네트워크 구성 지원 논의

이종화 의원, 민간단체 활용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 및 각종 사고 등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민간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각종 사건사고에 있어 경찰이나 소방력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와 지역민이 함께 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13일 홍성문예회관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화 의원(홍성2)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는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의원이 좌장을,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광복식 의용소방대 홍성연합회장, 최용영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회장, 이진

수 충청남도 재난대응과장, 김광종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재난 및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인식됐던 게 사실"이라며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과 자원봉사단체 간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할 방안에 관해 조례 제정 등 근거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금 부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OECD 교통사고 사망자수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2014년 기준 4647명, 보행자 노인사망자수 1위를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역량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진서기자

115 X 120 mm

민간단체 · 지역민 활용 안전네트워크 갖춰야

이종화 충남도의원 의정토론회... 자연재난 대응 등 협력 관계 구축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 및 각종 사고 등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선 민간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각종 사건사고에 있어 경찰이나 소방력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와 지역민이 함께 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13일 홍성문화회관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

다고 밝혔다.

이종화 의원(홍성2)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는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의원이 좌장을,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광복식 의용소방대 홍성연합회장, 최용영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회장, 이진수 충청남도 재난대응과장, 김광종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재난 및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인식됐던 게 사실"이라며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과 자원봉사단체 간의 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할 방안에 관해 조례 제정 등 근거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금 부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OECD 교통사고 사망자수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지난 2014년 기준 4647명, 보행자 노인사망자수 1위를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역량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전과 관련한 주민참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주민참여 확대는 자치권 및 자치역량 강화로 이어지며, 안전역량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도와 시·군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자정임 기자 j2516@dailycn.net**

226 X 95 mm

충남 민간단체 체계적 지원과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돼야

도의회 의정토론 "충남 발생 자연재난 및 각종 사고 유연한 대처 필요"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 및 각종 사고 등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민간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종 사건 사고에 있어 경찰이나 소방력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와 지역민이 함께 '안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13일 홍성문예회관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을 주제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종화 의원(홍성 2)이 마련한 이번 의정 토론회는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의원이 좌장을,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또한 광복식 의용소방대 홍성연합회장, 최용영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회장, 이진수 충청남도 재난대응과장, 김광종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재난 및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인식됐던 게 사실"이라며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민과 자원봉사단체 간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안

전을 확보한 방안에 관해 조례 제정 등 근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금 부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OECD 교통사고 사망자수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2014년 기준 4647명, 보행자 노인사망자수 1위를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역량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부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도 의회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종합해 도와 시·군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우명균 기자 woomk22@daum.net

□ 인터넷 뉴스(15전)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 및 각종 사고 등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각종 사건사고에 있어 경찰이나 소방력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와 지역민이 함께 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충남도의회는 13일 홍성문예회관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는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의원이 좌장을,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광복식 의용소방대 홍성연합회장, 최용영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회장, 이진수 충청남도 재난대응과장, 김광중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재난 및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인식됐던 게 사실"이라며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과 자원봉사단체 간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할 방안에 관해 조례 제정 등 근거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금 부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OECD 교통사고 사망자수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2014년 기준 4647명, 보행자 노인사망자수 1위를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역량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전과 관련한 주민 참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주민참여 확대는 자치권 및 자치역량 강화로 이어지며, 안전역량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순서에서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도와 시·군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